

가족계획사업 시대 가정 교과서를 통해 본 가정관리 교육*

김연희†, 문만용‡

1. 머리말

요즘은 출산율이 급감하여 국가 소멸을 걱정하지만, 한때 인구가 너무 많아 경제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전 사회를 뒤덮은 때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계획사업이 경제개발정책과 함께 국가시책으로 채택되었고, 국제기구의 지원을 토대로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전 국가적으로 진행되었다.¹ 초기에는 농어촌지역이 중심 대상이었고, 1970년대 들어서면서 도시에서도 대대적인 가족계획사업이 추진되었다. 중산층 대상의 피임은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도시영세민에 대한 피임 서비스 역시 강화되었다.

전국적으로 가족계획사업이 활발하게 시행되던 1970년대 초반 해도 “세 자녀

DOI: <http://dx.doi.org/10.36092/KJHS.2024.46.1.175>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 - 2021S1A5C2A02086985)과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K학술확산연구소 사업의 지원(AKS-2023-KDA-1250001)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본 논문의 수정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imwoowha@hanmail.net / ‡ 교신저자,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mymoon@jbnu.ac.kr

1.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50년사』(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30년』(1991)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61년 설립되어 가족계획사업의 추진 중심으로 활약했던 대한가족계획협회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를 거쳐 현재 인구보건복지협회(Korea Population, Health and Welfare Association, KoPHWA)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가족계획사업을 새롭게 평가하는 연구가 다수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배은경, 『현대 한국의 인간 재생산: 여성, 모성, 가족계획사업』(시간여행, 2012); 조은주, 『가족과 통치: 인구는 어떻게 정치의 문제가 되었나』(창비, 2018)를 참고할 수 있다.

를 3년 터울로 낳고 35세에 단산하자”를 의미하는 $3 \cdot 3 \cdot 35$ 의 숫자가 이 사업을 대변했다.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로, 1980년에는 “둘도 많다”로 바뀌었다. 이렇듯 가족계획사업에서 지향하는 자녀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그 결과 1988년 인구증가율 1% 이하, 합계출산율 1.7명을 기록했다. 이런 수치는 한국 사회가 빠르게 인구증가 억제에 성공했음을 의미했다.²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족계획사업의 중요 행위자 중 하나였던 가족계획어머니회는 1977년 새마을부녀회로 통합되기에 이르렀다.³

가족계획사업과 관련한 연구들은 대개 농촌, 도시에서 가족계획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검토했고, 주로 산아제한을 실천하기 위한 피임법을 보급하는 과정, 피임법을 포함한 재생산기술이 활용되는 방식, 새로운 피임기술의 지역화 과정 등을 중심 의제로 삼았다. 또 이 과정이 대개 국가 주도로 진행됨에 따라 가족계획이라는 사적인 선택이 인구관리라는 국가의 통치 영역으로 편입되는 과정이 분석되기도 했다.⁴

기존 가족계획사업 연구는 대체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임기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한 시책을 분석했다. 그에 비해 본 논문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여중·고생으로 시야를 확장하고 가족계획사업을 중심으로 모자보건, 아동복지까지 포함하는 가정관리 교육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청소년기에 접어든 1970년대에 들어 미래 출산을 담당할 이들에게도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에 문교부는 1974년 인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인구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1978년에는 고등학교, 1979년에는 중학교, 1980년에는 국민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가족계획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⁵ 그리고 1981년 12월에는 초·중등 교육과정령을 전면 개정하여 “가

² 인구보건복지협회, 앞의 책, 132. 이러한 성과가 실제 가족계획사업의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란이 있다. 배은경, 앞의 책, 231-239 참고.

³ 가족계획어머니회의 병합 배경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피임방법의 전환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단산을 전제로 하는 자궁 결찰술이 루프, 경구용 피임약에 이어 확산되면서 이 조직을 유지할 명분이 약해졌다. 이에 대해서는 박종헌, “한국생식 의료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소극적 정책 보조자에서 산업개척자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참고.

⁴ 김옥경, “역사로 본 한국가족계획의 발달요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1); 박종헌, 앞의 논문 (2008); 김홍주, “한국사회의 근대화 기획과 가족정치: 가족계획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5:1 (2001), 51-82; 배은경, 앞의 책; 조은주, 앞의 책.

⁵ 이진경, “한국가족계획사업의 생체정치학”, 『문화과학』 33 (2003), 181-206.

족의 수가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시키고 앞으로의 이상적인 가족 규모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갖게 한다”는 목적으로 가족계획 교육을 강화했다.⁶ 이에 따라 가족계획사업이라는 국가시책이 교육과정에도 적극 반영되어 구체적인 내용이 교과서에 담기게 되었다. 비록 가족계획사업의 본격화 흐름에 비하면 다소 늦었지만, 한국 학교 교육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고, 교과서가 청소년, 더 나아가 국민의 의식이나 가치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중요한 변화였다.⁷ 무엇보다 당시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를 도모하는 교육이 국가의 발전과 함께 해야 한다는 교육관도 국가시책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고무하기도 했다.⁸ 교사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다수의 순종적이고 비슷한 나이의 학생이 장시간 함께 생활하는 학교는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국가시책을 실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당시 그리 높지 않았던 상급학교 진학률을 고려할 때 여자 고등학생은 이후 사회적 여론 형성을 주도할 중요한 대상이었다.⁹

가족계획을 주로 다룬 과목은 도덕, 가정 등이었다. 1980년대 중반의 연구에 의하면 각 교과 중 가장 큰 비중으로 인구문제,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을 다룬 과목은 도덕이었지만, 도덕은 대체로 인구문제에 치중해 있었다.¹⁰ 반면 두 번째 높은 비중을 보인 가정은 세 영역을 모두 고루 다루고 있었고, 일차적으로 가정 생활이 대상이 되는 가족계획을 가장 분명하게 담아낸 교과였다. 1960년대 이래 1990년대 즈음까지 가정 교과는 대개 의식주, 가정관리를 중심 내용으로 했다. 의(衣) 분야는 섬유공학적 접근으로, 식(食) 분야는 식품공학 및 식품영양학의 내용으로, 주(住) 분야는 건축학 및 실내장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가정관리는 가정경제, 육아 및 보건위생을 포함했다. 이렇듯 가정 과목

6 김홍주, 앞의 논문 (2001).

7 교과서가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는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지적하는 연구는 국민 의식 형성에서 교과서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Muhammad Javed Sajid, “Ideology in Text Books,” *Asian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3:6 (2015), 575-581.

8 정범모, “교육과 국가발전”, 정범모·정원식, 『교육과 국가발전』 (교육출판사, 1972), 4.

9 1975년의 문교부 통계 연보에 의하면 인문계 실업계를 모두 합쳐 여고생 수는 296,057명으로, 같은 나이의 약 15%만이 고등학교에 다녔다. <https://library.moe.go.kr/#/search/detail/14400?offset=5> (2024. 4. 29 접속). 고교평준화가 확대된 1977년 여고생이 늘어나긴 했지만, 고등학생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은 1980년대가 지나서였다.

10 남철현·정기혜, 『초·중·고교 교과서의 인구 및 모자보건과 가족계획 내용분석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참고.

은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종합과학 교과였다.¹¹ 가족계획의 기본 목적은 적절한 수의 자녀를 건강하게 길러서 행복한 가정을 구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직접적인 가족계획사업과 함께 육아와 모자보건에 대한 논의까지 함께 다룰 것이다.

가정과 교과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인간 발달 영역과 가족관계 영역”의 범주에서 여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가족계획 계몽 및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¹² 가정 과목은 여중·고생들에게 1980년까지 3년간 8-10단위로 편제되어 필수로 주 3시간을 교육받아야 하는 중요한 과목이었다.¹³ 심지어 모든 교과목의 내용이 축소되고 수준 저하를 목적으로 단행되었던 1981년의 제4차 교육과정 개정에서조차 가정 교과는 소폭 축소되는 정도에 그쳤다. 고등학교 3학

¹¹ 김명신,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 5.

¹² 가정과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크게 세 범주로 나누어 정리 검토했다. 가정 교과 내용의 변천에 대해서는 谷忠一, 『文教部 檢定 家事科受驗準備の指導』 (東京: 啓文社, 1934); 최이순·이기열·심치선, 『한국가정학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5); 이인희·이옥임, 『가정과 교수법』 (수학사, 1977); 한의수,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의 발전 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3); 홍종선, “인문계고등학교 가정과 교과과정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79); 현정자, “한국가정과 교육교과의 변천에 관한 연구: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7); 김명신, 앞의 논문; 박정순, “중고등학교 가정과 교육내용의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 (1993), 13-20; 전경선,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의 변천에 관한 연구 -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단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중학교 기술·가정과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등 가장 많은 연구가 존재한다. 두 번째로 가정 교과 내용구성의 방향성 및 영향에 대해서는 채옥희, “가정과 학습 내용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군산지역의 여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73); 이정덕, “가정과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그 과제”, 『동국대학교 논문집』 15 (1976), 139-158; 신상욱, “가정교육 연구의 접근 방향”, 『대한가정학회지』 24:2 (1986), 165-167; 주정숙·손원교,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운영의 현황 및 그 효율화 방안”, 『논문집』 (1982), 141-175; 한성숙, “중학교 가정과와 타교과의 내용 관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75)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가정 과목의 비교는 윤인경, “고등학교 가정과 교육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1 (1989), 33-43; 홍문자, “한국, 중국, 일본의 중등가정과 교육과정의 비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1); 정옥남·김영숙·전옥하, “우리나라와 일본의 고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의 비교연구”, 『교과교육연구』 9 (1986), 149-171 등을 들 수 있다.

¹³ 여학생들은 1학년 주당 3시간, 2학년 주당 5시간, 3학년 주당 3시간으로 편제되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에게 가정은 필수과목이지만 가사 대신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을 선택할 수 있었다. 실업·가정은 3년 동안 18단위(학기당 평균 주당 3시간)로 편제되었다. 함종규, 『한국교육과정변천사연구』 (교육과학사, 2003), 438.

년에서 배워야 할 시간을 1, 2학년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편된 것이다.¹⁴

가족계획이라는 용어와 관념이 등장한 것은 오래되었지만 1960년대 가족계획사업이 시행되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야 학교 교육에서도 가족계획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기본적으로 가족계획사업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여성을 중심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국가시책의 수행이나 의식 개조에 가장 많이 동원되는, 대규모이자 체계적이며 잘 구축된 조직인 학교에서 당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가족계획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졌는가는 가족계획사업의 지향이 확장되어 간 방식을 이해한다는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당시 사회가 믿고 지향하던 가족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여중·고에서 사용된 가정 교과서들의 내용을 분석해 가족계획사업이 투영된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¹⁵ 아울러 가족계획과 연결된 모자보건 인식 형성과 확산 과정을 검토해 볼 것이다.

가정 교과서 분석을 통해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한편 여중·고생에 대한 당시 사회적 인식을 살필 수 있다. 이를 위해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중반, 1970년대 중반 이후, 그리고 1980년대 교과 내용의 차이를 비교하여 가족계획사업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학교 교육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이전의 구체적인 모습과 실제 학교 가정과 교육에 이식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도 따져 보겠다. 아울러 가정 교과 내용에 내포되어 지금까지 미혼모를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효과를 내는 “정상 가족”이라는 관념이 체화되는 과정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가족계획사업 관련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이 교육을 통해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이해하는 시도가 되리라 생각한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당시 가정 교과서의 발행 상황을 간략히 검토하려 한다. 교과서는 국가 정책의 큰 영향을 받으면 출판되었다. 특히 1963년의 제2차 교육과정부터 1981년의 제4차 교육과정 개정에 이르기까지 이 시기의 교육에서는 각각 반공, 새마을운동, 유신, 자주국방 등 국가시책에 따른 이념 공세가 강

¹⁴ 같은 책, 518.

¹⁵ 교과서를 통해 당시 사회가 확립하려던 가족 이데올로기를 보려는 연구로, 이은주, “아동 교과서 이미지에 함의된 가족 이데올로기 연구: 10~13세 도덕교과서 사례의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9:2 (2018), 373-389; 정용숙, “나치 시기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젠더와 가족 이데올로기”, 『독일연구』 38 (2018), 179-218 등이 있다.

화되었고, 이런 기조가 교과서에 반영되었다. 아울러 실업 및 실무능력 심화와 같은 실업·기능의 강화 등도 강조되었다. 이미 1950년대 1차 교육과정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와 중·고등학교 국어, 국민윤리 등 국가 이념이 반영되는 과목, 그리고 실업에 관한 교과서는 문교부가 저자인 국정으로 발행되었고, 그 외의 교과서들은 문교부가 제시한 기준과 구성을 중심으로 내용을 작성해 문교부 검정을 통과해야 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시기의 중학교 가정 교과서의 경우, 1965년까지 9개 출판사, 1966-71년까지 10개 출판사, 1972-83년까지 12개 출판사에서 발행한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해 사용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1971년까지 8개 출판사가 검정을 통과했으며, 1972-78년까지 7개 출판사, 1979년 이후는 10개 출판사로 늘어났다.¹⁶

2. 가족계획사업 이전의 가정 교과서

가정이라는 교과목의 내용이 학교에서 교육된 것은 개항 이후 서양 선교사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할 때부터이다.¹⁷ 이 과목은 시대마다 다르지만 대개 “가정생활을 실현하는 수단이나 기술만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이나 발달, 가족관계 생활자원의 활용, 경제생활 및 생활환경의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교육하여 실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과학이며 실천과학”으로 규정된다.¹⁸ 가정 교과 구성의 초기 단계부터 인간 활동과 관련한 거의 모든 내용을 다루는 분야였기에 1955년 문교부령 제45호로 발표된 제1차 교육과정 개정에서 교육목표가 “전인교육, 반공교육, 도의교육, 실업교육”으로 새롭게 설정되었음에도 가정 교과는 기존 교육 방향을 유지했다.¹⁹ 1950년대 중학교 가정 교과를 보면, 이 교과목은 “사회생활의 일원으로 가정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합심 전력해야 하는 의의를 자각”케 하는 것을 중심으로 관련 지식, 기능, 태도를 체득해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목표가 명시되었고, 이는 새로운 교육목표

¹⁶ 이기성, “검인정 교과서 출판의 발행 주체에 관한 연구: 지리·가정 과목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2); 전경선, 앞의 논문; 김명신, 앞의 논문; 장명희, “가정과 교육에서의 직업역량 강화 방안 탐색을 위한 기초 연구: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개정과 가사실업계 직업교육의 변화 방향 탐색”,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6:4 (2014), 129-146 참고.

¹⁷ 조민아, “대한제국기 ‘가정학’의 수용과 가정교육의 변화”, 『역사교육』 128 (2013), 225-257.

¹⁸ 김명신, 앞의 논문, 5.

¹⁹ 같은 논문, 11.

와 부합한다고 여겨졌다.²⁰

5.16 군사 정변 이후인 1963년 2월 이루어진 제2차 교육과정 개정도 가정 교과서의 내용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다.²¹ 이 개정은 문교부령 제120호에 의거,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 합리성, 지역성”을 내세웠고, 더불어 생활 경험을 강조했다.²² 적어도 1960년대까지 가정 과목의 목표는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의 일원”을 중심에 두고 “가정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합심 전력”하는 데 의의가 두어져 관련 각종 지식, 기능, 태도를 체득하고 능력을 길러 이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중심 기조였다.²³ 실습과 기능을 더 강조하기는 했지만, 이전과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1960년대 교과서는 이전과 비교하면 각 주제의 비중이 달라졌다. 무엇보다 1950년대 중학교 3학년 교과서와 비교해 유아(乳幼兒) 및 어린이 돌보기가 포함된 단원의 분량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학생들이 실제 육아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²⁴ 대신 고등학생의 경우 육아와 관련된 단원의 분량이 늘었다. 이는 여고생이 졸업하면 곧 결혼 적령기로 접어든다는 인식에 의해서였다. 육아의 사명, 임신, 출산에 관하여 알아둘 사항, 갓난아이 다루는 법과 어린이 발병률이 높은 병과 전염병을 다루는 내용을 포함해 40쪽 이상이 늘어났다.²⁵ 임신과 출산, 심지어 진통 과정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이에 의하면 진통은 “규칙적으로 아랫배가 당”기며 시작되었다.²⁶ “출산에 관하여 알아둘 사항”에서는 출산 준비[출산예정일, 아가옷, 기저귀, 이부자리, 산구(産具), 산실, 산파], 산육 중의 섭생[출산신고, 산후 섭양(攝養), 산후 주의, 산후 음식] 등을 다루었다. 또 “출산에 대한 준비”에서는 특히 소독의 중요성과 마음의 준비 등이 거론되었다.²⁷

당시 가정 교과서는 『이상적인 가정생활』, 『새로운 가정생활』, 『모범 중등가

20 이인희·이계학·이정근·정무일,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시안 개발에 관한 연구』(한국교육개발원, 1975), 26.

21 김명신, 앞의 논문, 12.

22 이인희·이계학·이정근·정무일, 앞의 책, 27.

23 같은 책, 26.

24 최이순 외, 『중학가정 I』(동아출판사, 1966), 99-118; 강한일 외, 『즐거운 중학가정 (3)』(신구문화사, 1966), 128-138.

25 장명옥 외, 『실업 가정과 새로운 가정』(영자문화사, 1966), 176-218.

26 같은 책, 180-185.

27 표경조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일반 I』(장왕사, 1968), 192, 193.

정, 『모범 고등가정』 등의 제목으로 간행되었다. 다분히 실생활에의 적용을 지향하는 종합교과인 가정 과목의 교과서가 바람직하고 본보기가 될 만한 가정 형성을 목표로 했음은 흥미로운 지점이다.²⁸ 중학생들에게 가족의 일원으로 “동생 돌보기, 노인 모시기” 등의 역할이 1학년과 3학년의 심화 정도를 달리해 제시되었다. 이는 이상적인 가정으로 3대가 모여 생활하는 대가족을 상정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어머니를 도와 목욕시키기, 아기를 안거나 눕히기, 장난감 고르기 등 가사 보조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1학년 과정에서 다루었다면,²⁹ 3학년 과정은 보육 전담자가 감당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모범 중등가정 III』은 태아에 대해 임부가 할 일, 젖먹이 다루기, 유아의 발육과 생리, 유아의 운동능력 발달 상황, 유아의 영양, 유아의 병, 유아복 등을 33쪽에 걸쳐 제시했다.³⁰ 또 『이상적인 가정생활 III』은 여기에 “(아기) 방의 일광, 환기, 청결, 운동, 휴양, 정신적, 정서적 지도”까지 포함했다.³¹

이 시기 교과서에 담긴 이상적인 가정은 대가족 전체가 건강하고, 민주적이며, 애정이 풍부하고 어린이의 양육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건전한 경제생활을 하고, 항상 생활의 개선과 향상을 도모해야 했다.³² 이러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가장 큰 전제는 결혼이었다. 결혼은 “행복한 부부 생활을 영위하며, 문화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건전한 가정을 만들고, 심신 모두 건전한 자손을 이루며, 종족의 번영을 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³³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자손의 양육이 필수적이었다. 실제로 1970년대의 교과서도 출산과 양육은 가정 구조가 변화하더라도 계속 존재할 가정의 기능으로 꼽았다.³⁴ 하지만 1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는 이상적인 가정을 위해 적절한 자녀 수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모범적인 가정은 결혼을 통해 형

²⁸ 전정선, 앞의 논문 (1999), 32.

²⁹ 조기홍 외, 『중학교 가정생활 I』 (정음사, 1959), 39, 73; 이흥수 외, 『모범 중등가정 I』 (홍지사, 1959), 12; 표경조 외, 『이상적인 가정생활 I』 (장왕사, 1959), 173.

³⁰ 이흥수 외, 『모범 중등가정 III』 (홍지사, 1957), 28-61.

³¹ 표경조 외, 『이상적인 가정생활 III』 (장왕사, 1959), 77-96. 이 내용은 1960-70년대 교과서에도 실렸다. 하지만 내용의 배치가 1950년대와 차이가 나기 시작했고, 따라서 다른 의미로 읽혔다. 이에 대해서는 이 논문 3절의 “(4) 정상 가족에 의한 정상 출산 관념과 가정 교과서”에서 살펴보려 한다.

³² 장명옥 외, 『고등학교 새로운 가정』 (영지문화사, 1967), 225-227.

³³ 이흥수 외, 『모범 고등가정 III』 (홍지사, 1967), 149-150.

³⁴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고등학교 가정3』 (고려서적주식회사, 1976), 93.

성된 가족이어야 했고, 이를 위한 출산도 당연히 결혼을 전제로 해야만 했기에 이 가정을 벗어나는 출산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1960년대 초중반 출판된 교과서들에서는 “올바른 육아는 국가적인 면 즉 인구문제의 분야와 관련해 … 질적 양적으로 고려할 문제”라고 설명하면서도 직접 가족계획을 언급하는 일은 드물었다.³⁵ 하지만 모자보건과 육아를 “아동 발달과 인간관계 영역”에서 다루기 시작한 일이 가지는 의미는 컸다. 인구에 관한 양적 관리의 질적 전환, 즉 단순히 많이 낳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보육과 양질의 교육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상적인 가정에서는 결혼, 출산과 양육이 핵심적인 요소임이 강조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3.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 그리고 아동복지

1) 가정 교과서에 등장한 가족계획과 모자보건

① 1960년대 말 가정 교과서의 변화

1961년 11월 69차 국가재건최고회의 상임위에서 가족계획사업이 국가시책으로 정식 의결되었고, 국가의 핵심적 과제였던 경제개발계획과 더불어 추진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부의 가족계획사업 추진 의지는 1963년 중앙부서의 “모자보건과”와 시도 단위의 “가족계획계” 신설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³⁶ 하지만 이 의지가 효과적인 정책 집행으로 진전된 것은 1968년 가족계획어머니회가 전국적으로 조직되고 나서였다.³⁷

1968년을 전후로 가족계획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비로소 가족계획에 관한 내용을 수용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1967년 발행된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에 “가족계획”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이다. 이 교과서에 의하면 가족계획의 정의는 “단순한 산아제한이 아니라 출산을 계획적으로

35 장명옥 외, 『실업 가정과 새로운 가정』 (영자문화사, 1966), 176.

36 조은주, 앞의 책, 75.

37 대한가족계획협회가 각종 산아제한 관련 정보를 담아 1968년 8월 창간된 『가정의 빛』은 피임방법에 대한 계몽뿐만 아니라 가정의 성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계획어머니회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하는 것”이었다.³⁸ 그리고 가족계획은 가정경제의 측면에서 “교육비와 보육비의 비율이 점차 높아 가고 자녀가 많으면 자연히 부모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했다.³⁹ 가족계획사업이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강조되었음을 생각할 때 가족계획을 가정경제와 관련지어 제시하는 설명은 이해할 만하다. 덧붙여 가족계획에 함께 등장한 모자보건의 의미는 “자신이 출산을 원할 때 책임질 수 있는 알맞은 수의 건강한 자녀를 낳아서 완전히 보육시키며 이렇게 함으로써 모성을 과중한 심신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온 가족이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⁴⁰

이 시기 가정 교과서가 가족계획에서 자녀의 숫자를 적정 수로 제한해야 함을 강조했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아제한은 “한정된 국토 안에서 생활하기에 인구가 많으면 나라가 부강하기 힘들”다는 국가적 필요에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의한 이상적 가족계획은 “2, 3명의 자녀를 두고 그들을 안전하게 교육”시키는 것으로 설명되었다.⁴¹ 가정경제, 더 크게는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적정한 수의 자녀를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제시된 것이었다.⁴² 이는 사적 선택인 가족계획에 대해 국가의 간여를 정당화하는 중심 논리였다.

1960년대 말 교과서에서 “3년간의 간격을 두고 분만하는 것”이 바람직한 출산의 모습으로 제시되었고, 이는 당시 가족계획사업에서 주장된 “세 살 터울로 세 자녀만 35세 이전에 낳자”는 세 자녀 운동을 의미했다.⁴³ 이른바 “3·3·35” 숫자로 표현되던 이 운동이 건강한 모체를 위해서도 좋다고 설명하면서 가족계획을 모자보건과도 연결하기도 했다. 모체는 “임신, 분만, 산육, 수유” 등의 영향을 받는데, 이런 모체를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출산 간격”이 강조되었다.⁴⁴ “자신이 출산을 원할 때 책임질 수 있는 알맞은 수의 건강한 자녀를 낳아서 완전히 보육시키며, 이렇게 함으로써 모성을 과중한 심신의

38 표경조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일반 I』 (장왕사, 1967), 196-197; 이흥수 외, 『현대가정 일반 3』 (계몽사, 1968), 327.

39 표경조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일반 I』 (장왕사, 1968), 197.

40 같은 책, 196-197; 이흥수 외, 『현대가정 일반 3』 (계몽사, 1968), 327.

41 표경조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일반 I』 (장왕사, 1968), 198.

42 문교부, 『실업계 고등학교 가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74), 176-177.

43 표경조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일반 I』 (장왕사, 1968), 197-198.

44 같은 책, 197.

부담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체 보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의 장래와 행복을 위해서”도 “2, 3명의 자녀를 두고 그들을 안전하게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했다. 가정의 기본인 출산과 양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녀의 수가 제시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자녀를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는 “불우한 불임 부부”에게 임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가족계획의 한 부분으로 덧붙였다.⁴⁵ 가족계획이 단순히 산아제한을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이 서술은 동시에 자녀가 없는 가족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힘들다는 점을 시사한다. 많은 자녀는 경제적 부담을 가져오고, 자녀가 없는 경우 불우하므로 이상적인 가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결혼과 적당한 수의 자녀가 필요충분조건임을 가족계획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② 1970년대 본격적인 가족계획 교육

1973년 8월 발표된 문교부령 325호 및 350호에 근거해 단행된 제3차 교육과정 개정은 적극적으로 가족계획에 교육이 개입하는 디딤판이었다. 이 3차 개정은 “국민교육헌장의 이념 구현, 민족의 역량 양성,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 기술교육의 쇄신”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⁴⁶ 이런 설정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 인간력의 총량이며 이런 역량을 길러내는 것은 교육의 힘”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했다.⁴⁷

이는 교육과정 개정에 그대로 녹아들었다. 중학교 가정 교과는 “의식주 생활과 육아 가정관리에 관한 과학적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고, “우리나라 고유의 부덕(婦德)을 계승·향상시키며 산업사회에 적응하는 현대적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⁴⁸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 목표도 “산업사회 적응 능력 배양”을 제외하고는 기존 여성성 강조와 가정에서의 역할을 기본으로 하는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중학생들의 교과 목표 역시 마찬가지였다.⁴⁹ 전근대 유교적 세계관에서 중시되던 “부덕”은 여자가 지켜야 할 도리 또는 여자의 아름다운 덕행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1950년대부터 “한국 가사

45 같은 책, 198.

46 김명신, 앞의 논문, 12.

47 한의수, 앞의 논문, 33.

48 문교부령 325호, 이인희·이옥임, 앞의 책, 27에서 재인용.

49 박정순, “중고등학교 가정과 교육 내용의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 (1993), 13-20.

교육은 한국 부도(婦道)의 수련이고 한국 여자교육의 중추”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지만,⁵⁰ 이제 과목의 공식 교육목표로 “부덕”이 등장함으로써 직업 선택 등에서도 성편향적인 관점이 더욱 부각되었다. 기본적으로 부덕은 해방 이후 여성 교육에서 강조되던 현모양처주의의 연장이었고, 특히 유신 시기에 서구화에 물들지 않은 전통적 부덕의 계승이 강조되는 모습을 보였다.⁵¹ 당시에도 부덕의 “현대적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에 관련한 한 연구에 따르면 1970년대 후반 1,500여 명에 대한 조사에서 부덕에 어울리는 가장 중요한 가치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자녀교육과 현모양처가 꼽혔다.⁵² 이는 부덕이 바람직한 가정과 직결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준다.

3차 교육과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 모든 고등학교 교과서에 가족계획과 모자보전이 포함되었다는 점이었다. 이는 1970-80년대 가족계획사업과 모자보전이 국가시책이었음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이런 시대적 지향에 따라 이 시기 가정 교과서는 대부분 “육아와 가정”을 VII 단원에 배치하여 가족계획, 모자보전을 함께 다루었다. 이에 따라 이전 교과서에서 육아나 임신 등을 다루면서 불과 몇 줄 정도에 불과했던 가족계획과 모자보전 관련 내용이 중요하게 부상했다. “육아와 가정, 임신과 출산, 어린이의 생리와 간호, 아동 교육, 아동 복리, 모자보전” 등이 중단원으로 정리되어 게재된 것이다. 이 내용은 가족 형성과 관계, 가족경제 등을 묶은 “인간 발달과 가족관계” 영역에 포함되었다. 기존 임신과 출산, 육아와 가정 등의 내용이 가족계획, 모자보전과 함께 정리, 편성되었고, 각각이 소단원으로 분리되어 소개되었다.

표면적으로 모자보전이 강조되는 배경에는 1973년 제정된 모자보전법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모자보전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했다. 교과서에 의하면 모성 보전의 핵심은 “자신이 출산을 원할 때 책임질 수 있는 알맞은 수의 건강한 자녀”를 낳는 일이었다.⁵³ 이는 과중한 자녀 양육이 모성보

50 김은경, “1950년대 여학교 교육을 통해 본 ‘현모양처’론의 특징”,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9:4 (2007), 137-151 중 140.

51 같은 글. 신항수, “박정희 정권기 전통 사상에 대한 인식 변화와 국민윤리 교육”, 『사총』 102 (2021), 81-118에서 알 수 있듯이 3차 교육과정에서 민족주체성과 전통이 이전보다 크게 두드러졌는데, 부덕의 강조도 그러한 흐름에 놓여 있다.

52 이정덕, “우리나라 전통적 부덕의 현대적 고찰”, 『가정학 연구』 4 (1979), 41-54.

53 표정조 외, 『인문계 고등 학교 가정 일반 I』 (장왕사, 1967), 196-197.

호에도 위협이 된다는 이전 인식의 지속이었고, 가족계획이 단순한 산아제한이 아니라 모자보건을 위한 중요한 전제로 여겨졌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법의 가장 큰 목적은 14조에 규정된 낙태에 대한 정당화 사유의 자의적 적용 부분이었다. 즉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를 정함으로써 형법의 낙태죄 조항을 사문화시켰다. 이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구조절의 효율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려는 조치였다.⁵⁴ 이 법으로 시행의 법적 근거를 갖게 된 피임법인 “월경조정술(menstrual regulation)”은 사실상 음압 임신중절의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1974년부터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모성보호의 수단”으로 월경조정술이 포함되어 시술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74년부터 1990년까지 시행된 월경조정술이 1962년부터 1990년까지 실시된 정관수술보다 더 많은 실적을 보였다.⁵⁵ 이러한 사실은 모자보건법이 모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가족계획사업의 도구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모자보건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1990년에 이르러서야 모자보건센터가 설치되었다는 점은 모자보건이 허구에 불과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⁵⁶ 또한 모성의 보호를 내세운 모자보건법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이거나 법률혼을 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출산 보호법령에는 모성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모자보건법이 지닌 한계를 보여준다.⁵⁷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보호받을 모성의 대상에 포함되지도 못한 것이다.

모든 가정 교과서가 문교부의 검정을 받았지만, 관련 단원의 내용이나 분량은 출판사마다 다소 차이가 났다. 유사한 점은 당시 교과서들이 대부분 가족계획의 필요성을 개인적·국가적·가정 경제적 차원으로 구분해 정리하고 관련 사업의 시행 연혁을 소개했다는 사실이다. 또 모자보건 사업 확대와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한 서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요산출판사의 교과서는 가족계획

54 김성진, “출산억제정책으로서 모자보건법과 낙태에 대한 반성적 접근”, 『법과 정책연구』 10:1 (2010), 63-82; 신유나·최규진,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의 역사: 인구정책변화에 따른 의미 변화와 ‘사회경제적 이유’ 포함 논쟁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6 (2020), 93-130 참고.

55 지승경,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초기 임신중절로서의 월경조정술(Menstrual Regulation) 제공에 대한 연구(1974-1990): 국가의 위법적 재생산 정책에 대한 소고”, 『여성학논집』 36:1 (2019), 121-158.

56 같은 글.

57 김인희, “‘모성’에 대한 법의 이해와 모성보호에 관한 고찰”, 『사회보장법연구』 8:2 (2019), 59-101.

사업의 현황을 “루우프 기술, 불임기술 각종 피임약제 보급 상황”을 중심으로 소개했으며, 먹는 피임약의 부작용도 언급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⁵⁸ 이는 다른 교과서에서 피임을 충분히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가족계획사업의 핵심 도구가 피임법의 보급이었음에도 여중·고생에게는 피임법을 충실히 전달하지 않았던 것이다.

교과서마다 가족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그 원인에 대해 교과서마다 가임여성의 격증, 초혼 연령의 저하, 남아선호 가치관, 뿌리 깊은 가부장제의 남아선호, 다자유복(多子有福) 사상, 출산 압력, 영유아 사망에 대한 불안 등을 제시했다. 다양한 진단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해결 방안은 교과서별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의식적인 계몽을 통한 가치관 확립”, “혼전 여성 교육 강화” 등 원론적인 인식 변화만을 강조했다.⁵⁹ 이는 이전 시기의 교과서들이 제시한 모범적인 가정 형태에 대한 설명과 다르지 않았다. 즉, 가족계획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서술이 강화되고, 모자 보건에 대한 언급도 본격화되었지만 대부분 가족계획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원론적인 서술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사실상 가족계획을 내세워 이상적인 혹은 정상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 셈이었다. 이처럼 3차 교육과정에 의한 모든 교과서의 Ⅶ 단원이 가족관계를 다루면서 가족계획에 대한 비중을 늘렸지만, 여기에 제시된 이상적인 가정 형태는 이전 시기 묘사된 것과 다르지 않았다.

③ 1980년대의 변화

1981년 제4차 교육과정 개정이 단행되었다. 그리고 이 개정의 핵심 지침은 “학습량 축소 수준 하향 조정”이었다.⁶⁰ 가정 과목 역시 이 지침에 따랐고, 가족계획과 모자보건 관련 내용들 역시 정비되었다. 중등학교 가정 교과에서 아동 보육 관련 단원이 사라졌고, 고등학교 가정 교과에서는 가족계획과 모자보건의 단위 편제가 달라졌다.⁶¹

이 변화를 교학사 가정 교과서로 살펴보면, 1983년 판의 교과서는 Ⅶ. 육아

58 장명옥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3』 (요산문화사, 1983), 317.

59 서병숙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정음사, 1982), 316.

60 1981년 문교부고시 제442호 제1항, 제2항.

61 1981년 단행된 제4차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 혁신과 문화장달을 국정 지표의 하나로 설정했고, 교육목표를 “정의로운 민주복지사회건설에 이바지할 자주적 창의적인 한국인 양성”에 두었다. 한의수, 앞의 논문, 49.

단원을 가족계획, 모자보건의 순서로 구성해 육아를 위해 요구되는 조건으로 모성의 건강을 다루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편제 방식은 4차 교육과정 개정 지침이 반영된 1984년 판에서 다소 변경되었다. 즉, V 단원 가족관계의 제1장의 1. “가정의 형성”에서 가족계획을, 2. “가족 발달”을 거쳐 3. “가족과 사회”에서 모자보건을 다루었다. 이런 내용의 흐름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형성하면서 자녀 출산 계획을 세우고, 가정 구성의 중요한 요소로 “자녀 수”를 결정하는 구성을 바랐직한 과정으로 제시했음을 의미했다. 이때 모자보건, 즉 “건강한 모성과 자녀”는 건강한 가족을 위한 조건이었다. 1983년 판에서 건강한 모성이 건강한 육아를 위해 고려되어야 했다면, 1984년 판에는 건강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모성의 건강함이 요구된 것이다. 건강한 모성을 실현하기 위해 교과서에서 제시한 방안은 결혼이었다. 그리고 출산과 육아 관련 정보들을 학습거리로 제공했다. 이런 방식으로의 내용 편제는 1984년 이후 출판된 동아출판사 교과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85년 동명사 교과서는 다른 출판사들과 서술 방식이 조금 달랐다. 가족계획과 관련해 “산아를 억제하는 경우 외에 자녀를 늘려야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즉, 산아 억제 방법으로 “만혼, 결혼 후 기구, 약품에 의한 수태 조절”뿐만 아니라 “낙태, 임신 중절 수술”이 있지만, 한편으로 “불임자 치료, 인공 수정, 사산·유산·조산의 방지”도 가족계획의 일부 방법으로 거론한 것이다.⁶² 가족계획이 곧 산아제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적절한 숫자라는 이름 아래 자녀 수를 제한하는 방식이 강조되었던 것과는 달리 자녀를 늘리는 방식에 대한 설명도 추가되었다는 점은 이전 시대 교과서들과 달라진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 임신 중절 수술을 가족계획의 중요 방식으로 언급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산아제한의 비중이 컸고, 그에 따라 모자보건에 대한 이해도 제한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 준다.

2) 가정 교과서의 육아와 아동복지

가정 교과서들에서 임신, 출산, 진통, 산욕, 육아는 중요한 주제였다. 기술된 내용은 비슷했지만, 각 항목의 편제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달랐다. 가장 크게 다른 점으로 다른 맥락과 배경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육아를

⁶² 장정옥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동명사, 1984), 280-281.

예로 들면, 1970년대 중반 이전의 교과서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유아(乳幼兒) 돌보기였다면, 그 이후의 교과서는 가족계획에 의해 “돌만 낳거나 돌도 많다”는 산아제한으로 “잘 길러야 하는” 양육과 보육이 강조된 것이다.

또 잘 기른다는 점을 단지 가정의 의무만으로 규정하지 않았음도 주목할 만하다. 아동복지가 주요한 의제로 등장하면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3차 개정안 이전 교과서에 이 내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제시된 아동복지 시설은 고아원, 보육소, 아동후생시설, 특수 아동 교육기관, 소년원의 나열에 불과했다. 어린이를 위한 복지시설을 “영아기, 학령 전 아동을 위한 탁아소와 유치원” 정도로 한정하고, 이 시설이 “이 시기의 정신적, 육체적인 올바른 성장이 인격 형성에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정도였다.⁶³ 그리고 아동 인권과 관련해서도 1924년 제네바 선언, 1939년 미국 어린이헌장, 1959년 UN 어린이 권리선언, 1957년 5월 5일 어린이헌장 공포 등 어린이의 권리를 언급하는 데 불과했다.

이런 서술과 내용 구성 방식이 1980년 전후의 교과서에서 상당히 달라졌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의 권리와 관련한 내용이 강조되었다.⁶⁴ 아동복지는 “가족이나 사회의 일원인 모든 아동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는 물론, 사회 공공단체나 기타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의 행복과 권익을 위한 조직과 활동”으로 정의되었다.⁶⁵ 건강하고 건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자로 가정만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지목되었다.⁶⁶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 제정과 관련한 연혁 소개만이 아니라 어린이헌장과 더불어 일반 아동을 위한 아동 상담소, 아동 휴양 시설, 탁아시설들과 더불어 불우 아동을 위한 보육 시설, 입양, 위탁 시설, 부랑아 보호 시설, 소년 직업 보도 시설 등도 소개했다.⁶⁷ 탁아시설은 “어머니의 직장, 질병 등으로 낮 동안 부모 대신 어린이를 보호해 주는 시설”로, 이런 시설에서 “아동은 신체적인 안전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정신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지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었다.⁶⁸ 장애와 관련한 아동복지시설도 “특수한

63 유희경 외, 『현대 가정 일반』 (계몽사, 1968), 61.

64 김명신, 앞의 논문 (1990), 14.

65 유송옥 외, 『가정』 (교학사, 1984), 324.

66 주월영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교학사, 1979), 356.

67 같은 책, 357-360.

68 같은 책, 358.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를 위한 시설”로 개념이 확장되었고, 관련 내용도 보강되었다.⁶⁹ “아동의 기본 인권을 존중하며 생활, 교육, 노동, 종교들에 관한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심신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명시한 아동헌장에 의거,⁷⁰ 아동복지는 “모든 어린이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며 저마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업으로 명시했다.⁷¹

한국의 아동복지에 대한 논의에서 1980년대는 보편적 아동복지가 부각된 시기로 설명한다. 한국전쟁 이후 아동복지시설과 해외 입양에 의한 아동복지가 강조되는 등 국가는 최소한 개입을 전제로 한 구호적 아동복지 양상을 보였다. 1960년대 들어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빈곤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부랑아, 가출 및 미혼모에 의한 아동 유기가 새로운 사회 문제도 대두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선별적 아동복지가 중시되었다. 즉, 아동의 시설 보호에서 가정 보호를 강조하면서 결손 가정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 결과 여러 사회복지 기관이 빈곤결손 가정의 아동 지원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1980년대 들어 아동복지법(兒童福利法)이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그 대상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아동뿐 아니라 일반 아동까지 포함하는 전체 아동으로 확대되었다. 즉, 보편적 아동복지가 시작된 것이다. 물론 닫힌 차원에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가 제기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정책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⁷²

실제로 이전과는 달라진 목적과 취지, 의의 등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 시설의 현실은 1970년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어린이 회관, 어린이 대공원, 과학관, 도서관이 증설되고, “근로 여성이나 가정교육에 결함이 있는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집 사업을 확충”한 것으로 소개했지만, 시설이 많지 않았다. 교과서는 1960년대와 비교하기까지 했는데, 1964년의 전국의 아동복지 시설 현황의 표를 제시했고, 이 표에 의하면 전국 566개의 복지 시설이 있었고, 그나마 서울, 부

69 주원영 외, 『고등학교 가정』 (장왕교재연구소, 1984), 311; 유송옥 외, 『가정』 (교학사, 1984), 324.

70 장정옥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동명사, 1984), 296.

71 유송옥 외, 『가정』 (교학사, 1984), 324.

72 우경연, “인구가족의 변화에 따른 가정유형별 아동복지현황과 분석”, 『아동복지연구소 보고서』 2013년 3호, 1-89; 우경연, “아동관련법과 아동복지법 변천사 연구”, 『아동복지연구소 보고서』 2013년 5호, 1-101.

산, 경기, 경북 등에 각각 72, 70, 93, 87개가 집중된 것으로 기록되었다.⁷³ 1980년대의 아동복지 시설을 보면, 1980년 1월 현재 611개 시설에 41,632명이 수용된 것으로 소개되었다.⁷⁴ 이는 1964년의 전국 566개에서 고작 45개가 늘어난 것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은 해외 입양이라는 방식으로 “건전한 가정” 밖의 수많은 아동을 해외로 내보내 해결했다.⁷⁵

아동복지 사업과 관련한 시설사업의 증설, 확장이 가능하려면 관계법 정비가 필요했다. 이런 상황을 가정 교과서에서 정리해 소개했다. 필요한 기본적인 법은 1961년 아동복지법과 고아 입양 특례법 등으로 이미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관련 시설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규정과 제한이 필요했는데, 이는 1981년에야 “아동복지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됨으로써 마련되었다. 이를 토대로 1960년대의 시설들 이외에 아동상담소, 육아시설, 영아시설, 아동 휴양시설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신 지체아, 신체 박약아 및 신체 부자유아를 위한 시설들도 신설되었으며 모자 보호 시설도 생겨났음을 소개했다. 이런 시설들은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 심신이 건전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와 국가에 의한 것이었다. 교과서들은 여기에 더해 아동 사업이 치료의 소극적 방법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면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사업에 치중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⁷⁶

1980년대 들어 보편적 아동복지라는 지향이 등장했지만, 현실 정책에서는 여전히 특별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도 교과서에서 아동복지에 대한 서술이 강화되면서 가족관계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다양해졌다.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가정의 강조 속에서 정상 가정의 범주에 벗어나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커진 것이다. 가족계획사업과 함께 양육·보육이 강조되면서 가정의 중요 구성원이 되는 아동 개인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이 덕분에 1981년 제4차 교육과정 개정안이 적극적으로 학습량 축소와 수준 하향

73 유희경 외, 『현대 가정 일반 3』 (계몽사, 1968), 61.

74 서병숙 외, 『고등학교 가정』 (동아출판사, 1985), 320.

75 손승영, “해외로 내몰린 미혼모의 자녀들: 배타적 가족문화와 국가의 책임 방기”, 『담론201』 23:1 (2020), 161-191; 이현정, “해외입양인 생모의 자녀양육포기 경험을 통한 ‘정상’ 가족 제도 와 사회 ‘인식’에 대한 연구”, 『가족과 문화』 32:2 (2020), 31-76.

76 유승욱 외, 『가정』 (교학사, 1984), 326.

조정으로 기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와 관련한 내용이 다소나마 증가했다는 특징을 보였다.

3) 순결 강조의 여중·고생 계몽

① 피임방법으로서의 순결 강조

1973년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월경조정술을 비롯한 피임 혹은 임신중절 사례가 확대되는 속에서 건강한 모성과 건강한 육아 역시 강조되었다. 하지만 이런 건강함의 추구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았던 고아 발생에 대해 교과서는 “비행 소년 소녀” 등에 의한다거나 “계획성 없이 출산한 소치”라고 진단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⁷⁷

“불우한” 고아 문제에 대응으로 아동복지가 강조되었다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여학생들에게 제시된 방법이 “순결”이었다. 교과서에 의하면 “성문제와 관련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므로 “청소년기의 순결 항목을 추가하여 건전한 이성 교제로 유도”해야 한다고 처방했다. 또 “장차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룩할 수 있게 순결 교육을 계단적으로 실시하며, 또 비행 소년 소녀를 교도(敎導)”해야 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 교도의 목적은 “명량한 부부 생활의 도모”였고, 이는 당대 시행된 가족계획에서 사회적 요구로 제시된 교육 사항이었다.⁷⁸ 여기에 “사회에 불우한 고아들이 있다는 것은 … 이러한 어두운 면도 계획성 있는 출산으로 없어질 수 있다”고 강조되기도 했다.⁷⁹ 정상 가족을 이루기 위한 첫 단계가 가임기 청소년들의 피임인 순결이었던 셈이다.

물론 1970년대 들어 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고, 1971년 성교육 지침서가 출간되기도 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인간발달연구소가 『중·고교생을 위한 성교육: 계획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펴낸 지침서는 “1970년도 문교부 대학교수 연구조성비에 의한 ‘중·고등학생 지도를 위한 성교육 모형’으로 제작된 것”이었다.⁸⁰ 하지만 이 지침서가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활

77 표경조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일반 I』 (장왕사, 1968), 198.

78 김명신, 앞의 논문, 29. 그는 서병숙 외, 『고등학교 가정』 (동아출판사, 1986)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성문제와 관련 청소년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기의 순결’ 항목을 추가하여 건전한 이성교제로 유도”했다고 밝혔다.

79 표경조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일반 I』 (장왕사, 1968), 197.

80 이화여자대학교 인간발달연구소, 『중·고교생을 위한 성교육: 계획과 실제』 (교육출판사, 1971).

용되었는지는 미지수이며, 이 책의 내용도 기존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소위 “성에 대한 과학적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에서부터 고3까지 총 27개의 주제별로 성교육을 다룬 이 지침서에서 “순결”은 중학교 3학년의 중주제로 제시되었지만, 피임은 중주제에 없다. 다만 제일 마지막인 고3 “가족계획”의 일부로 피임법을 논의하고 있다. 가정생활, 결혼의 뒤를 이은 마지막 중주제로 가족계획을 제시했고, 가족계획의 필요성에서도 인구증가와 빈곤을 내세우고, 과잉 인구를 막기 위한 대책이 가족계획사업임을 시사했다.⁸¹

이처럼 당시 논의되던 성교육이 사실상 “순결 교육”과 동의어로 사용되던 상황에서 가족계획사업의 확산으로 인구 혹은 성과 관련된 서술이 교과서에 포함되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순결이 절대적인 가치로 강조되는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⁸² 건전한 가정의 형성이라는 가정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중·고생들에게 순결을 강조하는 피임 교육은 교과서 맥락에 의하면 너무도 당연해 보였다. 교과서에 따라서는 가족관계의 한 장을 “성과 순결”로 설정해 “순결은 결혼 전의 성행위의 금지와 … 정신적 사랑을 통해서 서로의 인격에 손상을 주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가 참된 의미의 순결”임을 적시하기도 했다.⁸³ 이처럼 순결, 부덕과 현모양처가 강조되던 시기였지만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큰 인기를 누리던 하이틴 영화에서 주인공들은 성적 매력을 발산하던 모순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⁸⁴

결과적으로 1980년대에도 청소년에 대한 피임 관련 교육에서 순결 강조의 기조는 지속되었다. 더 나아가 “(결혼 전의) 정신적 사랑을 통해서 서로의 인격에 손상을 주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가 참된 의미의 순결”이며, “남녀 모두가 순결을 지키는 태도는 행복한 가정생활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순결 유지의 의무와 실패에 따른 책임은 여학생에게만 주어진 것도 사실이었다. 피임 교육은 사실상 순결에 대한 정신 교육에 불과했다. 이런 교과서의 맥락에 따라 교사들은 순결을 강조했으며, 이러한 교육 덕분에 학생들은 이성과의 교제가 잘못되면

81 이 지침서는 “집단 내의 악성 유전자를 도태시켜 민족의 유전적 소질을 정화시키기” 위해 우생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책, 203. 실제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조항은 사실상 우생법에 다름 아니었다. 소현숙, “우생학의 재림과 ‘정상/비정상’의 폭력: 가족계획사업과 장애인 강제불임수술”, 『역사비평』 132 (2020), 259-294.

82 김대현, “1950-60년대 성교육 담론의 재구성”, 『학림』 48 (2021), 547-596.

83 장정옥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1984, 동명사), 309-310.

84 윤은순, “1970년대 여성중등교육과 여학생 인식” 『여성과 역사』 33 (2020), 1-36.

“신세 망치는 일”이 된다고 믿었다. 정상 가족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임신과 출산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강렬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식된 것이다.

② 피임방법의 제시 맥락

1980년대까지 교과서를 중심으로 볼 때 순결을 위주로 한 교육의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물론 피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960년대 말 “모체에 병이 있어서 임신을 하면 건강 생명에 위험,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을 때” 행하는 영구적 피임법과 “어느 동안만 임신이 안 되도록 하는 것, 자녀를 더 원할 때 다시 임신할 수 있는” 일시적 피임법을 제공하는 설명이나,⁸⁵ 가족계획사업 현황을 설명하면서 “루우프 시술, 불임시술 각종 피임약제 보급”이 꾸준히 실시되고 있음을 밝히는 과정에서 피임방법이 나열되었다.⁸⁶ 이 과정에서 출산을 억제하는 방법으로서의 만혼, 결혼 후 기구 약품에 의한 수태 조절뿐만 아니라 “낙태, 임신 중절 수술”이 제시되기도 했다.⁸⁷

물론 이런 방식으로나마 1980년대 들어 구체적 피임 방식이 열거된 것은 이전 시대의 교과서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다.⁸⁸ 이런 변화나마 보인 것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1976년 발표된 설문 조사에 의하면 남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필수 내용의 첫 번째가 성교육이었다.⁸⁹ 또 1985년 가족계획 및 인구문제를 다룬 교과서를 검토한 연구에도 피임법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⁹⁰ 하지만 이러한 요구를 받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전면적으로 비중 있고 실효성 있는 피임 교육을 포함하

기란 당시 사회의 권위적인 분위기에서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교과서나 교육 현장에서는 순결을 강조했고, 피임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에는 소극적이었다. 드물게 수업 시간에 생리 주기와 임신 개월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당시 여고생들에게는 임신 방지와 더불어 또 피임을 배워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었고, 당시 청소년들은 다양한 경

85 이흥수 외, 『현대 가정 일반 3』 (계몽사, 1968), 327.

86 장명옥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3』 (요산문화사, 1983), 315.

87 장정옥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동명사, 1984), 281.

88 장명옥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3』 (요산문화사, 1983), 315; 장정옥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동명사, 1984), 280-281.

89 이정덕, “가정과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그 과제” (각주 12), 139-158.

90 남철현·정기혜, 앞의 책, 64.

로를 통해 공공연하게 관련 정보를 얻고 있었다. 피임이라기보다는 생리 주기 조절의 의미가 컸지만, 시험과 맞물릴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식으로 배란일 주기법을 이해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먹는 피임약을 이용해 생리 주기를 조절했던 것이다.⁹¹ 개인적 이유에서도 생리 조절을 했지만, 집단적 이유, 예를 들면 교련 검열, 체육대회, 해양훈련과 같은 학교 행사일에 생리일이 겹치는 일을 막기 위해 양호교사에 의해 경구용 피임약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도 있었다.⁹² 이런 경로를 통해 피임약을 구했다 하더라도 여학생들은 대개 약물 사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약물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정보를 거의 얻지 못했다. 가족계획사업의 확산으로 “순진하던 농촌 처녀들까지 피임법과 인공 임신중절법을 알게 되어 성개방 풍조에 따른 갖가지 부작용을 크게 부도덕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지만,⁹³ 여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제도권 교육에서 이루어진 피임교육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4) 정상 가족에 의한 정산 출산 관념과 가정 교과서

1970년대 이후 여자 중·고등학교의 교과목에서 설명된 가족계획은 출산과 육아를 기본 내용으로 점차 가족계획사업과 모자보건에 대한 내용이 더해졌다. 이는 국가시책이 교육에 수시로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미약하나마 교과서에 피임방법이 제시된 것은 순결의 강조와 건전한 이성 교제 등의 용어만으로는 “고아” 출산을 막을 수 없으리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1955-63년생,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가임기로 진입했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계획과 피임 교육은 더욱 중요해졌다. 비슷한 나이의 또래 집단으로 구성된 대규모 조직인 학교는 관련 교육과 계몽이 시도되기에 최적화된 공간이었다.

여중·고등학교라는 제도화된 공간에서 피임을 거론하기 시작했음은 매우

⁹¹ “생리조절에 남용되는 피임약 - 여고생의 실태를 조사”, 『동아일보』 1977. 8. 9. 이와 관련된 논의로, 이영주, “1960-1980년대 한국 월경 기술의 역사: 생리대, 탐폰, 경구피임약, 그리고 기술 사용자들”, 『과학기술과 사회』 5 (2023), 46-73 참조.

⁹² 1977년 발표된 “부산지방 여고생의 피임제 복용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조사 대상 530명 중 22.1%가 생리 기간을 조절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경구피임약을 사용했다. 정보 제공자는 양호교사가 41%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일부 학교에서 학교 행사 때 집단 복용을 권장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생리조절에 남용되는 피임약 - 여고생의 실태를 조사”, 『동아일보』 1977. 8. 9.

⁹³ “농촌 새 풍속도 (48) 변화 속 성문화 (17) 피임·중절 상식화”, 『경향신문』 1977. 8. 19.

새로운 변화였지만, 1980년대 교과서에서도 여전히 이들에게 순결을 강조하고, 혼전 임신과 자녀 출산을 비행으로 규정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피임 방식으로 낙태가 여학생 교과서에서 거론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산아제한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했다. 이는 배우자가 없지만 임신을 경험한 여성들의 모체와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 여전히 “모자보건”의 영역 밖에 있음을 시사했다. 그렇기에 여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자보건의 교육적 혹은 계몽적 가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또 한편으로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가족에 대한 관념을 강화시키는 역할도 담당했다. 비록 1950년대부터 결혼에 의한 가정의 구성 관련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⁹⁴ 교재 구조가 이를 그대로 반영한 것은 1981년 교육과정 개정으로 발간된 1980년대 중반 이후 교과서에서였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1980년대 중반의 가정 교과서 V 단원 “가족관계”는 1절 “가정의 형성”, 2절 “가족의 발달”, 3절 “가족과 사회”로 구성되었다. 그중 1절 “가정의 형성”은 결혼으로 시작해 가족계획으로 연결되며, 이는 또 3절 “가족과 사회”에서 가족계획사업과 병행했던 모자보건으로 이어졌다.⁹⁵ 이런 맥락에서 벗어난 가족관계와 구성은 정상이 아닐 수 있는 여지가 남겨진 것이다. 이런 교과서 편제 맥락에서 출산은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출산은 비정상이며, 이런 상황이라면 다음 단계인 아동 양육도 전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불안한, 더 나아가 불행한 상태로 인지될 수 있었다. 이런 상태와 맞닥뜨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결혼해 정상 가정을 만들어야 했다.

가정 교과서에 의하면 국가와 사회 조직의 기본 단위로서의 가정은 오직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를 중심으로 그 자녀들로 구성된 소집단이었다. 그리고 이 가정의 기본 기능은 “자녀를 낳아 기름으로써 제2세 국민을 양성하여 가계를 계승하게 하고 국가에도 유용한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었다.⁹⁶ 정상 가족의 가정생활은 사회적, 국가적 재생산을 위한 것이었다. 심지어 그 가정은 “건전한

94 1950년대의 교과서는 가정 형성을 위한 결혼을 성립하는 조건으로 “배우자 자격”을 아예 소절로 구성하고 여기에서 배우자의 우생학적 유전 혈통을 언급하기도 했다. 표경조 외, 『이상적인 가정생활』 (장왕사, 1956), 160-161.

95 장정옥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동명사, 1984), 278-296; 유송옥 외, 『가정』 (교학사, 1984), 297-323; 주원영 외, 『고등학교 가정』 (장왕교재연구소, 1984), 308-311; 서병숙 외, 『고등학교 가정』 (동아출판사, 1985), 300-371.

96 주원영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3』 (교학사, 1979), 12.

남편과 아내와의 결혼 생활로써 건전한 자녀가 출산'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⁹⁷ 그리고 부부와 부모의 관계로 형성되는 가정을 건전함의 보루로 설정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현재를 “사회가 발달되고 과학화되며 개인주의 사상이 고조될 수록 여성들의 독신주의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했는데, 이는 “비정상적 풍조”였다. 이에 휩쓸려 결혼을 거부하”는 경향은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진단했다.⁹⁸ 결국 결혼이 전제인 건전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가정 교과서가 강조하는 바람직한 목표였고, 이의 한 요소인 육아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것이다. 결혼을 하지 않는 “비정상적” 여성이나 결혼 후에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우한” 여성들이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이거나 더 나아가 모범적인 가정을 기본 단위로 하는 사회는 가능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은 가족 계획사업에 관한 서술이 등장하는 시기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처럼 교과서의 정상 가족에 대한 인식은 결혼에 의한 출산만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인식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을 비행이나 일탈로 규정하며 모자보건은커녕 사회적 지탄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수십 년간 지속된 이 제도 내에서의 교육은 사회에 굳건한 관념으로 자리 잡게 하는 데 일조했다. 물론 교과서의 서술이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 가족이라는 당시 이미 확립된 가치가 교과서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특정한 규범을 재생산함으로써 사회적 믿음이 고착화 혹은 강화되는 데 학교 교육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사회 문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압축적 성장을 거두었던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체로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원인의 하나로 유교 문화가 지적된다.⁹⁹ 2022년 12월 CNN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보도하면서 한국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청교도적 접근(puritanical approach)”을 취하고 있음을 첫 번째로 지적했다.¹⁰⁰ 이는 결혼으로 맺어진 이성의 부부만이 정

97 같은 책, 32.

98 장명옥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교사용 지도서』 (요산문화사, 1979), 214.

99 Yen-hsin Alice Cheng, “Ultra-low fertility in East Asia: Confucianism and its discontents”,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18 (2020), 83-120. 인구 변천에는 경제, 과학기술, 산업화 등의 물질적 조건과 함께 개인과 사회의 가치, 태도, 규범 등의 문화적·정신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이병호, “2차 인구변천 이론, 1986-2020: 특징, 논쟁, 합의”, 『한국인구학』 43:3 (2020), 37-68.

상적인 출산을 할 수 있다는 사회적 관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 교과서에서 강조했던 정상 가족 이외는 건전하지 않다고 하는 주장의 연장에 있다. 물론 이러한 인식도 유교 문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국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혼외출산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¹⁰¹ 여기에는 가족계획사업 이전부터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가족을 강조하고, 국가적 시책으로 가족계획사업을 다루면서도 여중·고생에게 순결만을 강조했던 교육의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4. 마치며

빠르게 낮아진 한국의 출산율에 가족계획사업이 얼마나 기여했을까? 가족계획사업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최근의 연구는 가족계획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인 1960년대 초반부터 출산율이 낮아지기 시작했음을 지적한다.¹⁰² 그렇다면 가족계획과 관련해 여학생들에게 행해진 교육의 효과는 얼마나 될까? 이 역시 엄밀한 평가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은 사회의 공통적인 규범이나 문화를 형성하고 확산시키는 수단이며 교과서는 그를 위한 도구로서 새로운 지식과 경향을 전달하지만, 동시에 교과서가 당시 지배적인 믿음이나 가치관을 반영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이 논문은 가정과 교과서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그러한 시도의 변화 양상과 영향을 가늠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가족계획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사업이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여중·고생이 배우는 가정 교과서에 관련 논의가 더욱 체계적으로 담기게 되었다. 그 속에서 셋에서 둘을 거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처럼 부부가 갖는 자녀의 수는 빠르게 줄어들었고, 1980년대 초반에 이르러 한국의 출산율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이 교과서에 명시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강력하게 추진된 가족계획사업이 학생들의 교과서에 반영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¹⁰⁰ Paula Hancocks, “South Korea spent \$200 billion, but it can’t pay people enough to have a baby”, CNN, 2022. 12. 4, <https://edition.cnn.com/2022/12/03/asia/south-korea-worlds-lowest-fertility-rate-intl-hnk-dst/index.html> (2024. 4. 29 접속).

¹⁰¹ OECD 국가 중 한국과 일본의 혼외출생률이 유독 낮고, 한국은 일본보다 더 낮다. 이병호, “혼전임신 출산의 추세, 2001~2015: 성혼과정 변화에 대한 함의”, 『한국인구학』 40:3 (2017), 107-129.

¹⁰² 배은경, 앞의 책, 232-235.

시간이 필요했다. 기본적으로 가족계획사업에서 역점을 두었던 피임법의 보급이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는 청소년들은 우선적인 교육 대상이 아니었다. 197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초·중·고 교과서에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포함되었다. 여러 과목 중에서 사회과가 인구문제에 가장 큰 비중을 할애했지만, 양적으로 두 번째였던 가정과는 인구문제, 가족계획, 모자보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었기에 더욱 중요했다.

기본적으로 가정과는 자연과학에서 인문·사회과학을 함께 다루는 종합적 과목이었기 때문에 인구 및 가족 건강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담을 수 있었다. 단순히 사회의 통념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가정의 상을 제시할 수 있었다. 교과서가 다루는 모습은 현실보다는 이상형 혹은 “건전한 세계”이며, 당대의 집단적인 의식을 보여준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¹⁰³ 특히 가정 교과서가 다루는 가정의 모습은 소위 “정상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는 데 한몫을 담당했다. 1950년대 사용된 교과서의 제목 자체가 모범 혹은 바람직한 가정생활을 표방했으며, 여기서 그려지는 행복한 가정은 적정한 수의 건강한 자녀를 갖추고 있어야 했고, 그렇지 못한 경우 “불우”한 가정으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서술은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담길 때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학교 교육에서 강조되는 바람직한 가족과 가족계획이라는 개념은 그 외의 가족과 출산을 터부시했다. 더욱이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사회를 지배하는 시절, 수직적 교육 구조는 정상 가족 개념을 사회 이데올로기화하는 데에 강력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를 배경으로 그러한 교육은 당시 여학생들의 인식에 큰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가정 교과서가 가족계획사업을 다루기 이전부터 학생들에게는 영유아 기르기나 가족의 건강 문제가 소개되었고, 학생들에게는 순결 교육이 강조되었다. 여중·고생에 대한 가족계획 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순결 교도였다. 순결하지 못한 몸에서 태어난 영아와 그 가족은 모자보건의 혜택은 기대하기 어려웠고, 오히려 사회적 배제라는 불행을 피할 수 없었다. 인공중절을 합법화한 모자보건법의 제정으로 모성과 모자보전이 부각되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정상 가족을 위한 원칙이었다. 한편, 이 구상에서 배제된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이 새롭

¹⁰³ 정용숙, 앞의 논문.

게 제시되면서 사회적 담론이 조금씩 균형을 잡아갔다. 이처럼 학교 교육에서 순결만이 강조되고 피임에 대한 교육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1970년대 후반 현실의 학생들은 이미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보하고 있었다. 이는 정부 정책을 반영했던 학교 교과서가 당시의 사회 현실을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200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 고령사회가 사회 문제화되면서 정부도 이에 대해 교육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상성, 정상 가족, 가족주의를 문제시하는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었다.¹⁰⁴ 이에 따라 실제 최근 중등 가정과 교육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담고 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가족을 소개하며 특정 가족에 대하여 편견이나 고정 관념을 갖지 않고 다양한 가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정과 교육이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과목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는 시대적 흐름과 인식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이다.

(투고: 2023년 11월 9일, 심사 완료: 2023년 12월 03일, 게재 확정: 2024년 4월 26일)

¹⁰⁴ 소현숙, “가족 근대화의 모델 찾기에서 가족 ‘정상성’에 대한 성찰로: 한국 현대 가족사 연구 동향과 과제”, 『역사문제연구』 46 (2021), 351-388에서 다양한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Family Management Education in the Era of Family Planning Project through Home Economics Textbooks

KIM Yeonhee and MOON Manyong (Je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ntent of secondary school Home Economics textbooks from the 1960s to the 1980s to trace what changes occurred when family planning project became a part of school education. It will identify the perceptions of middle and high school girls about family planning at the time. Home Economics was essentially an interdisciplinary subject, covering the natural sciences as well as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hich allowed for a wide range of discussions related to population and family health. According to the Home Economics textbooks, the main principle of family planning for girls of secondary school age was chastity. The textbooks argued that only heterosexual married couples could have normal births, and that any other birth or non-marriage was considered abnormal. This served to reinforce the social perception of the “normal family” in Korean society.

Keywords. Home Economics textbooks, family management education, family planning project, “normal family”, chastity